

# 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 6호		
건 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		
제안(출)자	김안숙 의원외 4명	제안(출)년월일	2018. 08.10.
검토위원명	전문위원 심 경 석		

## I. 제안내용

### 1. 제안이유

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2014년 5월 28일 제정되어 2015년 5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와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(안 제4조 및 제5조)

라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(안 제6조)

마.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위탁(안 제7조 및 제8조)

바.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(안 제10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    타 : 소관부서와 협의

## II. 검토 의견

- 제정 배경을 살펴보면,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학교를 다니지 않는 ‘학교 밖 청소년’이 약 3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, 이들이 겪고 있는 각종 폭력이나 어려움 등은 정확한 파악이 쉽지 않은 실정이며, 2017년 ‘학업중단자 수’는 서울특별시 8,470명, 경기도 14,330명, 인천광역시 2,346명, 부산광역시 2,459명 등 총 47,663명인 것으로 나타남.  
☞ 강남구(1,295명), 서초구(1,041명), 송파구(984명), 노원구(643명) 등
- 학업 중단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과 사회와의 단절 등을 초래하여 개인적·사회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종합적·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.
- 정부는 2013.10.30. 『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』 개정을 통해 ‘학업 중단 숙려제’를 의무화하고, 2014.5.28.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을 제정하여(2015.5.29. 시행)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·교육 등이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였음.

○ 서울시 자치구 중 강북·광진·구로·금천·동대문구 등 총 16개 자치구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.

○ 주요 내용으로는,
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에서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에 따라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,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4조(지원계획의 수립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에 근거한 계획으로서 지원사업의 추진방안,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음.
- 안 제5조(지원 사업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, 교육 지원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
- 안 제6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)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‘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’ 설치하되, 『청소년복지 지원법』 제10조에 따른 ‘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’가 대신하도록 규정하였음.

- 안 제7조(지원센터의 설치)에서는 근거하여 구청장은 ‘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’를 설치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단체 등 기능이 유사한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교육·직업체험 및 취업·자립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이를 효율적·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.
- 안 제8조(지원센터의 위탁)에서는 안 제7조(지원센터의 설치)에 따라 설치된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9조(대안교육기관 지원)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구청장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3조제3항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10조(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, 경찰서 등과 긴밀히 연계·협력하도록 규정하였음. 이는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1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)에 부합되는 규정임.

- 본 제정조례안은 『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근거하여 구청장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각종 지원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### Ⅲ. 참고자료

1. 관계법규
2. 서초구 학교밖 지원센터(꿈드림) 현황
3. 서초구 청소년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현황

##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청소년"이란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2. "학교 밖 청소년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.
  - 가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초등학교·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 - 나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·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 - 다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3. "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"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, 교육지원,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,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·연구·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

제5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14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1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
  2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
3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
  4.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·연구·교육·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
  5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
  6.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
 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②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·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7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)

- ①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(이하 "지원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1. 학교밖 청소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
  2.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
  3. 학교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  4.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  5. 그 밖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
-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③ 지원위원회의 조직·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12조(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  1.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
  2. 「청소년 기본법」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
  3.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 1.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학교밖 청소년 지원
  2. 학교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·협력
  3.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

4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
  5.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
  6.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
  7.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.
 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⑤ 제1항의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지정기준, 지정기간, 지정절차, 제3항의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# 제14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)

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.

## 「청소년 기본법」

####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8. "청소년단체"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.

#### 제14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.
- ④ 여성가족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

를」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청소년정책 분석·평가에 관한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분석·평가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.

- ⑥ 시행계획의 수립,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. 2. 3.]

##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

### 제9조(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, 청소년복지 및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(이하 "통합지원체계"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·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# 제29조(청소년상담복지센터)

- ①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·긴급구조·자활·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·광역시·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·군·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·지원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시·군·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21.>
- ④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·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추진배경

- 학업중단으로 인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 필요성 확대로 「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2014.5.28제정, 2015.5.29시행)
- 사업대상 : **학교 밖 청소년**
  -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
  - 제적, 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
  -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

## □ 추진경과

- '15. 2. : 법률 시행에 따라 서울시 내 확대운영(자치구 24곳 운영확대)
- '15. 5. :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(서울시 청소년담당관에 지정 신청하여 '15.4.20.지정 승인)

## □ 운영현황

- 운 영 체 : 재)푸른나무 청예단(센터장 : 이유미)
- 운영예산 : '18년 80,500천원(국:시=50:50)
- 인 력 : 총4명(센터장1명, 팀장1명, 상담사 2명)
- 추진사업 및 운영실적
  - 상담지원 : 개인 맞춤형 상담(진로, 또래관계, 심리적 어려움 등)
    - 개인상담 - 총 137명, · 집단상담 - 총 29집단(회) 324명
  - 교육지원 : 대학생 멘토와 함께하는 검정고시 대비 1:1 학습 멘토링,
    - 대학생 멘토와 검정고시 대비 일대일 멘토링, 인터넷 강의지원
    - 총 81집단(회) 406명
  - 취업지원 : One-Day 진로·직업체험 프로그램 『Job아라, Job!』 실시
    -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- 총 9집단(회) 84명
    - 힐링데이 休(휴) 문화체험 - 총 4집단(회) 16명
  - 자립지원 : 적성 및 흥미탐색을 통해 개인별 자격증 취득 지원
    - 전문자격취득 지원 - 총 4집단(회) 14명
    - 여성가족부 건강검진 연계 - 총 15집단(회) 80명

※ 지원대상 : 총235명(초등연령 10명, 중등연령 28명, 고등연령 122명, 20세이상 75명)

□ 법적근거 : 청소년복지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4조제4항)

- 청소년복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, 위원회의 위촉 및 회의절차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함

□ 위원회 구성

- 구성기관 : 청소년보호를 위한 필수연계기관으로 구성
  - 필수 연계기관 : 지방자치단체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청소년복지시설 및 지원시설등,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, 각급학교,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,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,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, 청소년비행예방센터,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
- 기 능
  -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등 실비지급
  -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및 선도대상 청소년 선정
  -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
  -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
  -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, 조례·규칙의 제·개정 제안
  - 기타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

- 임 기 : 2년